



“제주전역이 파란색으로 물들기를”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회 세계 자매인의 날을 앞두고 청사 벽면에 파란색 조명을 점등했다. 파란색 조명은 내달 8일까지 켜진다. 이상민기자

제주4·3 제73주년 특집 <상>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

4·3 완전 해결 ‘첫걸음’... 갈 길 멀어

73년 전 4월 제주섬 이념·광기·폭력 ‘일록’
20년 만에 특별법 개정... 배·보상 길 열려
추가조사·유해발굴·유적지 복원 등 과제도

4월 제주의 봄은 아름답다. 어디를 가더라도 아름다운 꽃들을 만날 수 있다.

동백꽃과 유채꽃, 벚꽃, 오름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수많은 야생화들이 지친 몸과 마음에 위안을 건네준다.

73년 전 4월 제주는 오늘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고 따뜻한 봄 바람이 불었지만 이념과 광기와 폭력으로 얼룩졌다.

냉전시대 하나된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와중에 도민들은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혹하게 희생됐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됐다. 당시 제주인구의 10

%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제주 4·3사건’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연좌제 등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산 사람들은 그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그럴수록 기억의 편린은 더 깊숙하게 머릿속에 박혔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흙으로 덮으려 해도 묻히지 않는 법.

정부와 도민들의 노력으로 4·3의 진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고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요구가 북받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때는 4·3특별법 공포와 제주4·3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유해발굴과 유적지 복원이 본격 시작됐다.

4·3사건의 배경과 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2014년에는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고 올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어 주었다.

4·3희생자와 유족이 염원했던 배·보상의 길을 열기까지 무려 7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행안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4·3희생자 위자료 지급기준과 금액,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4·3위자료(배·보상)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아직도 갈길이 멀다. 어쩌면 제주 4·3의 해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 모른다. 4·3의 슬픈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

고대모기자

고한 군법회의와 일반재판의 유죄판결을 일괄재심을 통해 무죄로 선고할 예정이다. 이외에 4·3사건과 관련해 도내에서 즉결처분을 받은 희생자에도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4·3트라우마치유센터도 건립된다.

이로써 어느 정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

아직도 미완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진상보고서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4·3희생자유해발굴과 유적지 복원, 1961년 특별조치법으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과 유족들의 재산문제 등 4·3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직도 갈길이 멀다. 어쩌면 제주 4·3의 해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 모른다. 4·3의 슬픈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

고대모기자

제주 전역 잿빛... 11년만에 황사 경보 미세먼지·초미세먼지·황사 경보 동시 발령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이 잿빛으로 뒤덮였다.

>>관련기사 4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미세먼지(PM-10) 경보를 발효한 데 이어 오후 1시에는 초미세먼지(PM-2.5) 경보를 발령했다.

제주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며, 초미세먼지 경보는 2015년 예보제 도입 후 이날 처음으로 내려졌다.

또 오후 1시를 기해 황사경보도 내려졌다. 황사경보는 황사로 인해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제주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2010년 11월 12일 이후 11년 만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지점별로 살펴보면 한 때 제주시 노형동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985 $\mu\text{g}/\text{m}^3$ 와 203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제주시 연동도 ‘매우 나쁨’ 수준인 985 $\mu\text{g}/\text{m}^3$ (미세먼지 농도)와 193 $\mu\text{g}/\text{m}^3$

/ m^3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올랐다. 이밖에도 이도동, 한림읍, 조천읍, 동홍동, 남원읍, 대정읍 등 모든 관측 지점이 ‘나쁨’ 수준의 대기질을 나타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경보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라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과격한 실외 운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황사마스크 등을 착용, 미세먼지 흡입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사장과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영 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30일 제주지역은 황사 농도가 점차 떨어져 경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내다봤다.

또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성민기자

민생경제 논의 ‘경제정책협의회’ 출범 29일 1차 회의... 각 분야별 대표·종사자 등 30명 참여

제주도가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는 상설기구인 경제정책협의회를 본격 출범해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원희룡 제주지사 주재로 29일 도청 탐라홀에서 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협의회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경제 정책에 반영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설기구였던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경제정책협의회는 도의회, 연구·학계, 경제단체, 소상공인 등 각 분야별 대표와 종사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원 지사가 맡는다.

원 지사는 첫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의 회복,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주도적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협의회 산하에 ‘경제위기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정책협의회 부위원장은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출됐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협의회가 민관협력 네트워크와 혁신성장 역량 강화에 중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기자 hasm@ihalla.com

한리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www.jejeup.or.kr

제주의 특별한 가치를 키웁니다

9천 가지 청정 생물자원과 용암해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 기술,
창의적인 인재와 함께 제주형 강소기업을 육성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기업의 성장파트너